

청소·경비원 일자리 확 줄인 연세대... '구조조정 갈등'

노동자
“노동강도 커져 더이상 못참아”
연세대
“무인경비... 고용관계도 아냐”
학생 커뮤니티 내 언급 ‘전투’
비정규직 대한 무관심도 문제



연세대학교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 /홍민영 수습기자



2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홍민영 수습기자

연세대학교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명예퇴직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충원이 불필요하거나, 일부는 학교와 직·간접 고용관계가 없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지만, 노동자들은 고용강도가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3일 연세대와 노동자 측에 따르면, 양 측은 작년 정년퇴직한 청소·경비노동자 34명의 충원 여부를 놓고 지난 10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해를 넘겨서도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정년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은 연세대 전체 노동자의 약 10%에 달하고, 올해 정년을 맞는 서울 시내 사립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연세대는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정년 퇴직한 31명의 노동자 후임 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이번 고용 갈등 또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학교 노동자측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 및 경비노동자 등 약 100명 가량이 기념관 정문을 점거하고 목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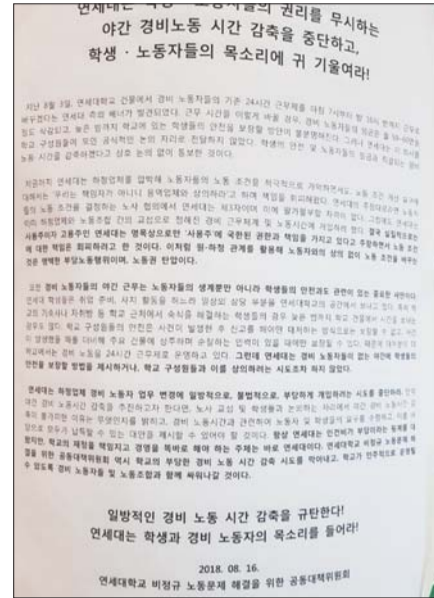
냈다. 집회를 주최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작년 연말 노동자들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대학과 용역회사들이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며 “오늘 시무식에서도 대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해 한마디 입장 발표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이 모씨는 “간물은 그대로인데 인력은 줄어들어 남은 사람들의 일만 과중해졌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학교의 인력 충원뿐이다. 목소리를 낸 지가 벌써 3개월인데 진짜 ‘사장’인 학교는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강 모씨

또한 “매년 해오던 연봉협상에서도 이번엔 아무런 말이 없더니, 정년퇴직자에 대한 충원 대책까지 제대로 내놓지 않아 속이 답답할 뿐이다”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작년 정년퇴직한 경비 노동자 16명의 후임 채용 계획은 없었으며, 청소 인력은 올해 퇴직한 16명의 50%인 8명 가량을 채용, 퇴직 주차인력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이 노동자 인력감축 이유로 ‘학생 정원 감소’나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학생 정원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축을 사고 있다. 실제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학교측의 일방적 경비 노동 시간 감축에 항의하는 벽보를 붙였다. /홍민영 수습기자

로 연세대학교 정보공시를 보면, 신입생 입학정원은 2016년 3366명, 2017년 3384명, 2018년 3417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재학생 정원 또한 2016년 1만3980명, 2017년 1만4041명, 2018년 1만4137명으로 증가했다.

최다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측은 매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학교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소속된 용역업체가 기준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학생 정원 감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고용 규모를 줄인다는 말은 전혀 사실무근”

이라며 “대학들 재정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비 노동자의 경우 지난 2015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이후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대응한 추가 충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노동자 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는 미화 노동자의 경우 대학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어서 용역업체와 노동자간 협의를 기다리고 있고, 주차 노동자의 경우는 주차사업자가 학교에 임대료 들어와 있는 경우라 학교와는 직·간접 고용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도 연세대는 2017년 말 정년 퇴직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결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청소 노동자의 자리를 단시간노동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냈다가 ‘저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무관심한 학생들을 탓하는 말들도 나온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사회과학대 학생 박 모(27) 씨는 “현수막이 학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며 “연세대에브리타임(교내 SNS)과 같은 교내 여론은 지금 폐미니즘과 취직 문제 이외에는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 연세대 에브리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비정규직’을 검색한 결과, 교내 청소·경비노동자와 관련된 글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 씨는 이어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동자 분들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홍민영 수습기자
 hys@metroseoul.co.kr



중앙대 제2회 접경영화제 포스터

중앙대 제2회 접경영화제 개최

중앙대(총장 김창수)는 오는 7일 오후 3시 CGV용산아이파크몰 18관에서 ‘제2회 접경(RCCZ,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Contact Zones)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단장 차용구)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추상미 감독의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상영되며,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씨네토크도 이어질 예정이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0년대 폴란드와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고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중앙대 접경인문학 연구단은 영화를 통해 접경에서 빚어진, 기록되었지만 기억되지 못한 삶에 주목하며, 접경지역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하기 위한 취지로 영화제를 기획했다.

/한용수 기자

“교육행정혁신... 학교, 학생교육 집중을”

서울시교육청 ‘2019주요업무계획’
교육지원청·교육청 역할 재분담
학교기본운영비 매년 5%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행정 혁신에 나선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고, 교육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등 학교가 학생교육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교육공공체 모두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학교를 위한 교육

청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조직으로 만들고, 본청은 정책기획 중심으로 슬림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고 학교자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사업을 매년 15%정도 줄인다. 1개 신규 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하는 식으로 앞으로 4년간 전체 사업의 30%를 감축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각종 학교업무를 분담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지원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부담스럽게 여기는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재·조

정역할도 한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5%씩 증액해 2022년까지 20% 확대할 예정이다. 목적 사업을 축소해 감축된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서울 1335개 학교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총 6838억원이다.

또 초등학교 3~6학년 1500개 학급에 학급당 150만원씩 지원해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립초 11곳을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더 놀자 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뮤지컬이나 연극 등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485개 학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시행된다.

조 교육감은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교육지원청-학교의 행정 분업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위한 교류, 공유, 준비 시간의 여유가 확대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 ‘주 5일 수업’ 의무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응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주5일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도 수업일로 공식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시행 등 학

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또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토요일·공휴일의 교내·외 체육대회 등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초·중·고 중 대다수는 주5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 토요일 수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학교장이 주5일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으나, 이

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교원의 복구는 토요일·공휴일 근무한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된다. 시행은 2020년 3월부터다.

/한용수 기자